

동반자관계(Partnership) 외교연구

: 한국-EU, 한국-러시아,
한국-중국 문서를 중심으로

도 종 윤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 지역통합연구부장)

동반자관계(Partnership) 외교연구

: 한국-EU, 한국-러시아, 한국-중국
문서를 중심으로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목 차

I. 들어가는 말	1
1. 문제 제기	1
2. 동반자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	4
II. 연구방법	9
1. 질적 연구	9
2. 근거이론	11
3. CAQDAS: 질적 자료 분석을 위한 컴퓨터 지원 소프트웨어	14
III. 한국과 관련국들의 주요 문서에 근거한 동반자관계	16
1. 한국과 동반자 국가와의 외교 관계	16
1) 한-미관계: 동맹 동반자관계	16
2) 각국의 동반자관계의 단계	17
2. 문서에 나타난 동반자관계의 의미 해석	20
1) 개념화	21
2) 범주화	24
3) 구조화	27
4) 주제화	30
IV. 맺음말	31
참고문헌	33

사전적(辭典的) 의미로 ‘동반자관계(partnership)’는 관련 행위자들이 상호 이익을 위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하여 이뤄진 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동반자관계는 뚜렷한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일부 정치인들의 언어적 수사에 그치고 있어 시간의 흐름이나 국제적 돌발 사건의 발생 시 적용될 수 있는 공통된 기준이나 원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한국-EU, 한국-러시아, 한국-중국 간 정상회담 및 주요 조약을 검토하여 각종 동반자관계의 일반의미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문에서 검토되는 각종 동반자관계에 관한 텍스트는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근거이론(grounded theory)으로 접근하며, 연구의 효용성과 편의를 위하여 ‘질적 자료 분석을 위한 컴퓨터 지원 소프트웨어(CAQDAS)’로 해석한다. 이 연구는 동반자관계에 관한 기존의 막연한 수사적 접근을 벗어나 자료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각 단어에 근거한 국가별 응집성과 일관성까지 대별해 볼 수 있는 해석이 도출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 성과는 국제정치에서 드러나는 ‘동반자관계’의 개념 및 원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줄 뿐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외교의 양자적, 다자적 관계 형성에서 이론적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검색어: 동반자관계, 질적연구, 근거이론, CAQDAS, NVIVO

I. 들어가는 말

1. 문제 제기

21세기 외교 관계의 중심어는 ‘동반자관계(partnership)’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전적 의미로 동반자관계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 기관 혹은 국가가 동료로서 함께 일을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¹ 탈냉전 이후 무역량의 비약적 증가, 인적(人的) 교류의 확대 그리고 각종 국제기구의 설립과 이에 따른 각국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국제무대에서 외교관계를 다양화하고 심화시키려는 노력이 보다 활발해 지고 있다. 각국의 외교 관계는 공관을 개설하고 외교관을 파견하는 형식적 단계를 넘어 보다 내실 있는 동반자관계를 맺어 새롭게 등장하는 도전과제를 공격적으로 풀기 위한 시도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EU의 경우 대략 10여 개 국가, 중국은 47개 국가와 동반자관계를 맺고 있으며, 동맹외교를 중시하는 미국도 네트워크 외교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멕시코(2005), 러시아(2008), 베트남(2009), 유럽연합(2010), 캐나다(2014), 인도(2015) 등과 다양한 수준의 동반자관계를 맺고 있다.²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아직 동반자관계에 대해 명쾌하게 합의된 정의에 다다르지 못했지만, 국제정치의 실천 영역에서 동반자관계는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상대국과 수교를 맺을 때 ‘단순수교 관계’, ‘우호관계’, ‘동반자관계’ 등 총 15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반자관계 외교의 선도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연합의 경우, ‘전략적 동반자(strategic partners)’, ‘포괄적 동반자(comprehensive partnership)’, ‘뜻이 맞는 동반자(like-minded partners)’ 등의 수직적 구분 외에도 ‘동유럽 동반자관계(Easter Partnership)’, ‘아프리카-EU 동반자관계’ 등 지리적 견지에서 동반자관계를 설정하기

¹ Partnership, Collins COBUILD English dictionary, London: Harper Collins Publisher, 1998.

² 동반자관계는 나라별로 다양한 단계별 호칭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포괄적 동반자관계,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 전략적 동반자관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포괄적 전략적 동맹 관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도 한다. 국제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건과 주제가 보다 복잡해지고 불확실해지는 가운데, 최적화된 외교 정책을 구축하기 위한 동반자 외교는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동반자관계 외교가 극복해야 할 도전도 만만치 않다. 동반자관계 외교는 뚜렷한 정책적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고, 일부 정치인들의 언어적 수사에 그치고 있어 일관성을 가지고 응집력 있게 적용될 수 있는 공통된 기준이나 원칙이 마련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동반자관계 외교라는 수사적 표현보다는 오히려 정책의 대상, 범위, 문제의식의 공유 등 내실 있는 의제를 관계의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³ 그러나 동반자관계 외교에서 정책의 초점을 무엇으로 수립시켜야 할 것인지 주목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반자관계를 공식화한 외교 문서의 고찰을 통해 그것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목적과 범위는 무엇인지 규명이 필요하다. 물론 경우 따라서는 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 혹은 인권보장 등 대원칙(meta-principles)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건 또는 선언에 나타난 동반자 외교의 문헌적 고찰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필요하다.

첫째, 동반자관계 외교가 선언하고 있는 여러 원칙이나 비전은 문건에 집약되어 있고 그 문건은 관계를 맺은 당사자들이 지향하는 관계를 보다 창조적인 정책으로 구체화시키기 위한 초석이 된다. 양자 혹은 다자 외교에서 국가 간 합의를 플랫폼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기본적인 접근이므로 문건화된 합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 것인지 보다 많은 토론이 필요한 것은 자명하다. 이는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고 훗날 실천으로 구체화된 정책이 당초의 동반자 외교가 지향하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예컨대 어떤 외교 관계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공유한다’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양자 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한 토대가 가치 공유에 있음을 내재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나라와의 동반자관계 외교는 애초부터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원칙을 공유한다 함은 관계의 당사국들이 할 수 있는 국내외적 기여-독재 국가에 대한 제재, 문화를 통한 민주주의 원칙의 전파, 민주주의 국가로서 상대국의 정책에 대한 존중, 언론 자유와 인권 수호를 위한 국제적 규범의 공동 준수-를 정책 입안 시에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또한 실무선에서 채택되는 정책의 실천이나 정책평가에서

³ 강준영, “전략, 동반자, 협력… 단어와 수사보다 내실에 주목해야”, 『신동아』, 2009년 12월호, <http://shindonga.donga.com/3/all/13/108963/2> (2016.11.05. 검색); “한중관계, 중요한 건 채우기”, 『한국일보』, 2008년 5월 29일, <http://www.hankookilbo.com/v/af21ce37c2c542a28edd4823f972f718>, (2016.11.05. 검색)

민주주의 원칙 존중은 준수되어야 할 강령이 되며 정책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고민할 때도 근거가 된다. 따라서 동반자관계 외교가 사실상 모호한 표현이기 때문에 단지 슬로건에 불과하다거나, 실천 과정에서 모호하다는 주장이 강력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둘째, 동반자관계 외교가 기존의 전통적인 외교관계나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접근과 어떤 차이와 공통점이 있는지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예컨대 동맹이나 협력 등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가 관건이 된다. 예컨대 한국-미국 관계는 ‘동반자관계’로 접근하기 보다는 ‘동맹 관계’로 접근하는 편이 보다 타당하며, 한국-EU 관계는 동맹이 아닌 동반자관계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미국이든 EU든 민주주의, 시장자유경제, 인권존중 등 대 원칙의 측면에서 공유하는 바가 크지만 한국-미국, 한국-EU 관계는 관계 설정에서 어떤 언어로 불려야 하는지가 설명되어야 한다. 이는 상대국이 가진 위상, 국제적 비전, 관계의 차별화, 관심 이슈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동반자 외교가 전통적인 외교 관계와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이러한 외교 형태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규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외교 방향과 상대의 관심사항을 전략적으로 이해하고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외교 관계의 실천에 앞서 먼저 확보해야 할 과제는 동반자관계 외교가 무엇인지 의미를 규정하는 것과 그에 대한 범위와 관련된 이슈를 무엇으로 한계 지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외교 관계의 수준과 범위를 고심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의제의 내실화를 기할 수는 없음을 분명하다. 다만, 이 글에서는 한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각국의 외교를 비교 분석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동반자 외교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초점을 맞출 것이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연구 질문을 던진다. 첫째, 동반자관계 외교가 무엇인가? 하는 존재론적인 질문이다. 이는 여러 외교 활동을 통해 현전하는 동반자관계 외교의 실체가 무엇으로 정의되어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동반자관계 외교가 모호한 것은 그것을 다루는 국가들이 다양하고 각 문서마다 상대에 따라 다르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외교 문서는 동반자관계 외교를 정의하지 않고 상황에 대한 규정(description of situations)으로 그 의미를 대신하고 있다. 또한 동반자관계 외교가 언급된 진술문의 앞뒤에 있는 각종 수식어구들이 동반자관계 외교의 변형과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고려해야 할 것은 동반자관계 외교를 선언한 각종의 문서들이 어떤 문장으로 전후를 서술하고 있는가에 관해 탐색하는 것이다. 이는 동반자관계 외교 관계가 모호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경험을 통해 우리 의식에 내재화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서술되고 있

기 때문에 이를 문맥의 탐색을 통해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한다. 둘째, 앞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이러한 동반자관계 외교가 관련된 문서는 어떻게 구조화 되어 묶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말하자면, 예컨대 다양한 진술문들이 어떤 개념을 향해 묶음을 형성하여 수렴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 따라서 동반자외교관계를 지시하는 진술들을 어떤 범주로 묶을 수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범주화 되어, 지향하는 주제가 되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동반자외교와 관련된 다양한 진술들이 어떤 경우에는 일관된 맥락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보다 더 분산되어 있을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한다. 이는 결국 동반자외교관계가 얼마나 응집력있게 지시하고 있는지, 혹은 분산되어 있어 모호함을 더하고 있는지 밝혀내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는 훗날 정책의 형성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보다 집중력있게 전력과 과제를 제시할 것인지, 혹은 심화의 정도를 어느 방향으로 맞춰야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동반자관계 외교와 관련된 전략문서 혹은 외교적 선언,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언어 분석이 필수적이다. 국제정치학에서 이용된 기존의 언어 분석은 대체로 양적 연구의 하나인 통계 기법을 이용한 빈도 분석이 주류이나,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를 시도하며 보다 세분화 하여 근거이론(Grounded Theory)에 따르도록 하겠다.

2. 동반자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

국제정치의 주요개념인 동반자관계는 언론에 자주 소개되는 소재이기도 하다. 대개 국내 주요 외교 행사가 있을 때, 상대국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규정하느냐를 설명하면서 언급된다. 예컨대, 한국-미국 관계는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이고, 한국-중국, 한국-베트남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한국-인도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 한국-EU, 한국-러시아, 한국-인도, 한국-멕시코 등은 '전략적 동반자관계'이며, 한국-일본 관계는 예외적으로 '미래 지향적 성숙한 동반자관계' 등으로 표현한다.⁴ 한국 정부

⁴ 중앙일보, “한·EU ‘전략적 동반자관계’ 격상”, 2009년 12월 1일; 서울신문, “전략적 동반자관계란”, 2010년 1월 27일; 한겨레, “한·베트남,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 2009년 10월 21일; 연합뉴스,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 2015년 5월 18일.

는 공식적으로, “전략적이라는 표현은 양국 간 정치·경제적 중요도에 따라, 동반자라는 표현은 양국 간 신뢰도 및 정서적 호감도를 반영한다.”는 입장이다.⁵

동반자관계 외교는 타국에서도 다양하게 언급된다. 중국은 1996년부터 외국과의 양자 외교관계를 맺을 때 단순 수교, 선린 우호, 동반자, 전통 우호, 혈맹의 다섯 단계로 느슨하게 나누어왔다. 중국은 미국과는 달리 동맹관계 없이 동반자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중국이 원칙적으로 어느 국가와도 동맹을 맺지 않기 때문”이며, 대신 상호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인 협력을 통해 발전을 추구하는 관계라는 의미에서 동반자관계를 활용하고 있다. 말하자면, “제3자를 겨냥하지 않고, 양자관계를 넘어 지역적 혹은 전 지구적 사안을 함께 논의하며, 단기적 사안뿐 아니라 중장기적 사안들도 논의하는 것을 기초로 하는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중국의 전략이며 이때 유용한 것이 동반자관계라는 것이다.⁶ 이를 보다 구체화하면, “동반자외교는 경제적 세계화의 추세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면서, 국제관계를 이분법적인 우적(友敵) 개념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공동의 이익과 협력의 영역으로 해석하는 사고를 전제”하면서, “강대국 및 주변국과 협력의 영역 확대, 갈등보다는 협상에 의한 평화적 문제해결, 미국중심의 국제무대 편입을 통한 경제발전과 국력제고, 평화적 방식에 의한 강대국 부상전략”으로서 중국외교의 외연을 넓히는 전략이라고 정리된다.⁷ 따라서 우리의 전략적 입장에서 볼 때, 중국과의 동반자관계는 결국 “경제적 이익과 문화적 동질성을 넘어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보와 평화 그리고 공동 번영과 관련된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는 단계”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같은 맥락이다.⁸ 또한 중국의 동반자외교는 기본적으로 강대국의 전략으로 이해해야하며, 단지 중국은 여전히 한계에 부딪혀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동반자외교를 통해 “지구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적응하면서 동시에 세계가 중국의 부상을 수용하도록” 하지만, 현재는 적용 범위, 형식, 심도 등에서 일관되지 못하며, “국가 간 정상적이고 양호한 관계의 발전을 언급하는 수준으로 퇴색”하고 말았다는 것이다.⁹ 이 같은 비

⁵ 연합뉴스, “한·캐나다 채택한 '전략적동반자관계'란”, 2014년 9월 23일.

⁶ 강준영, (2009)

⁷ 김홍규, “중국의 동반자 외교 소고(小考): 개념, 전개 및 함의에 대한 이해”, 『한국정치학회보』, vol.43, no.2, 2009, p.287.

⁸ 서진영,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의미와 실제”, 『국가전략 연구』, vol/11, no.2, 2011년 (여름), p.145.

⁹ 이정남,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외교에 대한 이해와 한중관계”, 『평화연구』, vol.17, no.2, 2009, p.100.

판과는 달리 보다 전략적 맥락에서 의미를 찾아 중국의 동반자관계 외교는 공격적 논리(assertive logic)와 수비적 논리(defensive logic)가 아울러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직된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즉, 중국은 자신의 핵심이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는 세계 평화를 위해 기여할 것이지만(수비적 논리),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는 지금 이를 바탕으로 중국에게 유리한 국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전략적)동반자관계를 지렛대로 이용한다(공격적 논리)는 것이다.¹⁰

동반자관계 외교를 오로지 국가의 위상에 따른 전략으로 파악하는데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말하자면,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국가 간 관계들의 위계 속에 위치 지을 수 있는 개념이 아니며, 관계의 내용으로서가 아니라 상대국을 인식하는 형식으로 결정되는 개념”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사례를 보면, “중국과의 관계를 미국 패권의 확산으로 무너진 자국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안목의 관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체계 차원에서 강대국의 위상 추락을 만회하고자 하는 전략일 뿐 아니라 주어진 관계망 속에서 실리를 챙기기 위한 실속형 전략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¹¹ 강대국의 전략이라면 국제 정치 구조를 형성해 나가는 입장에서 보다 자유로운 전술로 접근 가능하지만, 동반자관계 외교는 주어진 구조 속에서 실리를 챙기는 이익 추구 행위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동반자관계는 외교 전략의 실천적 내용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다. 말하자면 “외교 전략은 경쟁외교와 창조외교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은 창조외교의 한 사례로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다자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전략은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지지하는 다극적 국제질서의 전형”으로서 접점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로서 한국과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모두 전략적 이익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양자가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철저히 실천적 실리가 도사리고 있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접근이다.¹² 그러나 동반자관계는 여전히 분명히 정의되지 않았으며, 탐색적 차원에 머무르는

중간적 전략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예컨대 러시아의 경우, 한국인들이 러시아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반대로 러시아가 한국에 요구하는 기대도 서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양측의 관계가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전략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이 러시아를 위협적인 존재로 -6·25전쟁, 공산주의 KAL 007 사건, 스킨헤드 등- 생각하거나 혹은 무관심한 태도로 대하는 반면, 러시아 역시 한국에 극동의 경제 협력의 파트너로 생각할 뿐 그 이상의 상상력은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양측의 제한적인 이익 관계는 결국 이익과 손실이 아니라, 이익과 무관심 사이에서 균형있게 전략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러시아로서는 동북아의 지역 안정에 전혀 무관심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점은 한국-러시아 간의 미래 관계 설정에서 주요 전제가 된다. 러시아에게 한국-미국 동맹은 지역 안보의 주요 위협요인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양자가 관심분야의 확대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를 제약 조건으로 대화와 협력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통로는 ‘전략적 동반자’라는 이름으로 관계를 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¹³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적어로 한국-러시아 관계에서 동반자관계는 상호 우호 조건을 추구하지만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자가 확인된 부분만 제한하여 이익을 공유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리스본 조약(Treaty of Lisbon) 이후, 대외 관계의 폭과 깊이를 보다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EU의 경우, 2015년 말 기준으로 총 10개국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다른 나라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각각에 대하여 개별적 성격 -‘전략적 동반자관계’, ‘뜻이 맞는 동반자관계’ 등- 을 부여하고 있다.¹⁴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현시(presence) 정책을 채택하면서, 중국, 일본, 인도, 한국의 4개국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고 있다. EU가 다른 나라에 비해 구별되는 차이점은 동반자관계의 내면적 성격에 규범적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자주 언급되고 있는 유럽식 국제관계의 이해, 즉 구성주의적 관점에 기인하고 있는 바가 크다고 보인다. 말하자면, 동반자관계 외교가 “기존의 군사 중심의 하드파워(hard power) 동맹보다 경제, 사회, 문화, 환

¹⁰ Feng Zhongping & Huang Jing, China's Strategic partnership diplomacy: engaging with a changing world, ESPO(European Strategic Partnership Observatory,) Working Paper 8, June, 2014.

¹¹ 신범식, “러-중 관계로 본 ‘전략적 동반자관계’: 개념과 현실 그리고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vol.44, no.2, 2010, p.137.

¹² 고상두, “러시아는 한국의 창조외교를 위한 전략적 동반자”, 『JPI PeaceNet』, 2016년 10월 18일, http://www.jpi.or.kr/kor/regular/policy_view.sky?code=archive&id=5507 (2016.11.05.검색)

¹³ 게오르기 톨로라야(Georgy Toloraya), “러시아와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모색: 안보협력에서의 문제와 시사점들-”,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배정호·Alexander N. Fedorovskiy(편), 통일연구원, 2010, pp.89-118.

¹⁴ EU가 동반자관계의 명칭에 중국처럼 어떤 일관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다만, 개별 사례를 통해 간접적인 확인이 가능할 뿐이다. 예컨대 EU가 최근 수립한 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축에 관한 논의는 최진우, “EU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축 현황과 한-EU 관계”, 『유럽연구』, vol. 28, no.3, 2010. 참조.

경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층위의 소프트파워적인 특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¹⁵ 이것은 바로 EU의 특성으로 자주 언급되는 ‘규범권력(normative power)’ 혹은 ‘민간권력(civilian power)’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론적으로 보자면, 구성주의는 행위자들의 협력과 상호작용에 따른 이익과 정체성 변화가 상호주관적 이해관계에서 속에서 형성된다. 그런데 이때 상호주관적 이해관계는 행위자들 사이의 협력과정에서 순환적 구조를 가지게 되며 개별 행위자들이 공동의 의미가 부여된 행위에 참여하면서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에서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행위자들의 정체성과 이익들이 내재화되면서 새로운 인식사회(epistemic community)를 구성하고, 인식사회를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규범(norm)이 형성된다. 결국, 상호 주관적 이해관계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현된 정체성과 규범에 기반해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인식사회의 형태를 파트너십(동반자관계)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⁶ 이렇게 보면, EU에게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관계의 주체인 양측이 예정한 현실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의무와 권리를 설정하는 노력뿐 아니라 규범적(normative)이고 실질적인(substantive) 측면을 모두 공유하는 셈이 된다.¹⁷ 따라서 EU의 동반자관계는 물질적 이익은 물론, “민주주의, 인권, 법치, 시장경제 등을 존중하는 가치 동맹”으로서 성격이 함께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¹⁸ 그러나 EU의 동반자관계 외교에 대한 토론은 여전히 직관적, 규범적, 제안적 성격에 머물러 있으며, 실천적 전략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이 과제라고 할 것이다.

¹⁵ 이무성, “파트너십(동반자관계) 외교관계에 관한 구성주의적 접근”, 『JPI 정책포럼』, 제주평화연구원, 2016.01, p.4.

¹⁶ 이무성(2016), p.6.

¹⁷ Michael Reiterer, “The Role of ‘Strategic Partnerships’ in the EU’s Relations with Asia”. In *The Palgrave Handbook of EU-Asia Relations*, by Thomas Christiansen, Emil Kirchner and Philomena Murray(eds.) London: Palgrave 2013 p.75.

¹⁸ 최진우(2010), p.75.

II. 연구방법

1. 질적 연구

국내외를 막론하고 질적 연구가 활성화 되어 있는 학문 분야는 교육학, 간호학, 사회학, 심리학 등이며 특히 교육학과 간호학 분야가 질적 연구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대개의 학문 연구가 그렇듯 질적 연구의 성과도 이론 탐구 분야와 경험적 사례 분석으로 나뉘는데, 이론 연구로는 내러티브 접근, 현상학적 접근, 근거 이론적 접근, 문화기술지 접근 등으로 구분되고 사례 분석은 각 접근법에 기반 한 실증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질적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소개된 크레스웰(John Creswell 2007), 덴진과 링컨(Denzin&Lincoln 2011) 등이 질적 연구의 이론화를 총론 차원에서 개괄하고 있다. 이들은 질적 연구의 범주를 현상학적, 문화기술지, 내러티브, 근거이론 등의 범주로 나누고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고, 어떻게 탐구 방법을 정교화 할 수 있는지 소개하면서, 학문 문과별로 적용사례까지 소개하고 있다. 질적 연구는 이론적이든, 사례분석이든 철학적 기반이 연구 해석의 중요한 전제가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질적 연구는 철학적 논의가 선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연구자와 대상간의 분리를 전제하지 않는 질적 연구 방법의 특성상 연구의 지향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또한 질적 연구는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글쓰기-가 중요하게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철학적 세계관과 이를 수집된 정보에 투영하여 어떻게 제시할지 혹은 설득할 것인가가 질적 연구의 핵심과제가 된다.

국내 연구의 경우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다. 연구자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독창적인 이론 전개 보다는 해외 사례를 소개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¹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연구자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장르적 접근, 글쓰기의 방법, 데이터의 다양화 등에 대한 접근이 활발하게 소개 되고 있다. 김영천&주재홍(2010), 김영천&

¹⁹ 국내에서 질적 연구의 이론화는 주로 김영천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2012년부터 ‘질적 연구 시리즈’ I~VI까지 출간한 바 있다.

이동성(2013)은 질적 연구에서 글쓰기가 곧 독자를 설득하는 방법임을 전제한다. 따라서 설득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아직은 실험적이기는 하지만, 개인적 내러티브, 탈장르적, 포스트모던적 접근 등이 그러한 시도가 될 수 있다고 본다.²⁰ 예컨대 포스트모더니즘은 철학의 사조일 뿐 아니라, 문학, 사회학, 정치학 등 지식의 이론적 기반에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철학적 기반을 중요시하는 질적 연구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포스트모더니즘적 접근의 경우, 메타 내러티브를 거부하고 진리와 실재의 구성, 재현의 불가능성, 권력과 지식의 유착 등을 공통적인 특성으로 하는데, 이를 전제로 질적 연구의 실천적 아이디어가 ‘국지적·맥락적 지식의 탐색’, ‘자기반성’, ‘다성성’으로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²¹ 또한 현상학적 접근에 따르면, 객관성을 추구하는 여타 과학이론과는 달리 연구자의 서술하는 자세가 연구전략의 중심이 된다. 말하자면,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체험의 의미를 추출하여 이를 중심 주제로 구성하는 하는 것이 첫 단계인데,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독자들이 현상에 일체감을 느끼도록 하여 설득력 있는 연구 성과를 제시하는 핵심이다. 그리고 이때 연구자의 성찰 과정이 구체적으로 담겨질 필요가 있으며, 연구물을 서술할 때 어조와 단어의 사용에도 유의해야 함을 강조한다.²²

한편, 질적 연구는 면담과 체험이 연구과정의 중심에 서지만, 그 이외의 다양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질적 연구를 위한 다양한 자료(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쓰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향후 도전해야 할 과제이다. 예컨대 문서(documents)는 그런 대표적인 경우다. 문서는 공식 기록은 물론, 연설문, 회고록, 서간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이러한 데이터가 활발히 이용되지 못했던 것은 간호학, 교육학 등 질적 연구가 활발한 학문 분과에서는 이러한 문서의 중요도가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다양한 경험은 문서를 통해 기록된 경우가 많

²⁰ 구체적으로 보면, 문학적 글쓰기로서 시, 소설, 희곡 등이 접목되며, 예술적 글쓰기로서 회화, 플라쥬, 음악, 무용 등이, 포스트모던적 글쓰기로서 자기반영적 글쓰기(self-reflexing writing)와 다성성 글쓰기(multi-vocal writing) 등을 들 수 있다. 김영천&주재홍, “질적연구에서의 글쓰기: 다양한 접근들의 이해”, 『열린교육연구』, vol.18, no.1, 2010, pp.155-183; 김영천&이동성, “질적 연구에서의 대안적 글쓰기 이론화 탐색”, 『열린교육연구』, vol.21, no.1, 2013, pp.79-76 등을 참고.

²¹ 김영천&주재홍, “질적연구의 지적 전통으로서 포스트모더니즘: 그 방법적 이슈들, 교육인류학연구, vol.15, no.3, 2012, pp.29-61.

²² 정상원&김영천, “질적연구에서의 현상학적 글쓰기의 전략과 방법의 연구”, 교육문화연구, vol.20, no.3, 2014, pp.5-42.

고, 구체적으로 외교사, 국제 관계학, 정치학 등에서는 면담이나 체험보다는 기록으로 남긴 문서가 압도적으로 많은 자료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방법론적 토론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질적 연구가 주로 의존하고 있는 면담이나 참여관찰을 보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의 자아를 파악하고 기록에 반영된 사회적 현상을 검토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훨씬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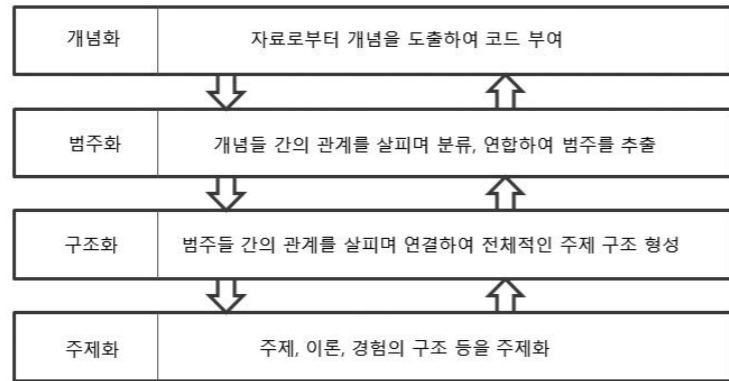
2. 근거이론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 중 ‘근거이론(Grounded Theory)’에 기초하여 진행한다. 근거이론은 글레이저와 스트라우스(Barney G. Glaser & Anselm L. Strauss)가 1967년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을 내놓으면서 알려지게 되었고²⁴ 이후 스트라우스와 코빈(Strauss & Corbin, 1990), 그라세(Glaser, 1992), 차마즈(Charmaz, 2006, 2011) 등이 발전시켰다. 근거이론은 어떤 현상에 대한 기술(記述)보다는 어떤 사건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상황(자료)을 개념화하고 이러한 개념들을 묶음으로 범주화한 후, 범주들 간의 구조를 엮어 나가면서 이를 토대로 최종 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질적 연구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만 근거이론은 개념화에서부터 주제 도출까지 이러한 절차를 비교적 명확하게 따른다.

²³ 김영천&정상원, “질적연구 방법으로서 문서분석”, 『교육문화연구』, vol.21, no.6, 2015, pp.253-285.

²⁴ 이 글에서는 1999년도 출간본을 기준으로 한다.

그림 1) 질적 자료 분석의 일반 절차 ²⁵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연구자로 하여금 이론을 발견하거나 생성하도록 돕는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때의 “이론이란, 코딩을 통해 구축된 연구 주제의 최종결과물을 뜻하는데, 이는 소수의 천재가 만든 원리나 법칙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자료에 대한 연구자의 해명”을 뜻한다.²⁶ 근거이론은 무엇보다 자료 수집에 초점이 놓이게 되는데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상호 비교를 통해 개념화 및 범주화를 시키는 특성을 지닌다. 때문에 근거이론은 연구자로 하여금 자료 수집과 그 자료에 대한 분석과 해석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반복적 과정을 거치게 하며, 이는 자료와 분석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찰을 유도하게 끔한다.²⁷

근거이론 전개의 첫 단계는 발생한 사건에 대한 상황을 자료로서 추출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은 대체로 면담, 조사, 문건 검토 등을 거쳐서 자료를 추출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코딩작업이다. 코딩은 언어에 기반한 정보 또는 시각화된 데이터를 요약하거나 핵심을 포착하여 상징인 단어나 짧은 문장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이때 이용되는 데이터는 인터뷰한 원고, 현장조사 노트, 잡지, 문서, 사진, 비디오, 웹사이트, 이메일 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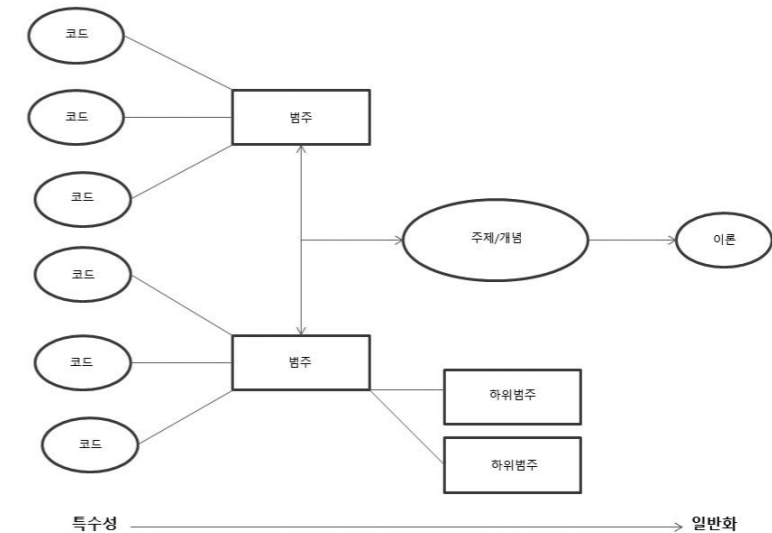
²⁵ 오영범 외(2016), p.37 인용.

²⁶ 박종원, 『질적 자료분석: Nvivo 10응용』, 부산: 부경대학교 출판부, 2014, p.135.

²⁷ Kathy Charmaz, “Grounded Theory Methods in Social Justice Research”, in N. K. Denzin & Y.S. Lincoln (eds.),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4th), London: SAGE, 2011, pp.359-380.

포함된다.²⁸ 세 번째 단계는 1차 코딩된 자료를 다시 정리하여 범주별로 묶는 작업이다. 코딩은 끊임없이 반복 되는데, 자료가 많은 수록 여러차례 반복되면 중간에 재수정되기도 한다. 코딩된 자료는 사람이 직접 기록하기도 하지만, 이를 도와주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정리하기도 하는데, NVIVO의 경우 모아진 자료들은 노드(node)라는 곳에 저장이 된다. 코딩을 통해 개념화된 지시체(reference)들은 다시 연구자의 개입에 의하여 범주화된다. 네 번째 단계는 범주화된 노드들 간의 관계를 주제화하여 묶는 작업이다. 이때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범주화된 자료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예컨대 진술문의 군집 분포, 빈도수, 중심어를 매개로한 관계 설정 등을 보여준다. 다만,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모든 작업을 대신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코딩작업과 범주화 작업시에 연구자가 얼마나 통찰력있게 작업을 해주는가에 따라 관계설정의 충실도가 달라질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계 개념화, 범주화, 구조화 작업이 끝난 결과물에 대해 연구자가 주제를 도출하는 작업으로 마무리한다.

그림 2) 질적 연구에서 코드(code)와 이론(theory) 간의 관계 ²⁹



²⁸ Saldana (2009), p.3.

²⁹ Johny Saldana (2009), p.12.

대개의 질적 연구가 면담이나 관찰을 통해 연구 노트를 작성하고, 연구 중에 수집·기록된 데이터를 코딩화하는 작업을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국제정치 연구의 경우 문건으로 남은 방대한 기록들이 자료로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자료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이는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연구 작업을 수행하되, 동반자관계 연구와 관련된 데이터를 문건으로 좁혀서 접근하겠다는 것으로, 개념화, 범주화, 구조화, 주제화를 통해 최종 이론을 도출하겠다는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3. CAQDAS: 질적 자료 분석을 위한 컴퓨터 지원 소프트웨어

질적 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에 의해 개념화, 범주화, 구조화, 주제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근거이론도 대체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³⁰ 과거에는 이러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기억하고, 저장하고 정리하는 일이 작업이 사람의 기억에 의존하여 손으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질적 연구는 특정상 연구자의 성찰이 깊이 요구되고 순간순간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메모, 연구노트 등을 활용한다고 해도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자료를 정리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이와 같은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 되었다. 질적 연구를 돕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칭하여 ‘질적 자료 분석을 위한 컴퓨터 지원 소프트웨어(Computer-assisted qualitative data analysis software: 이하 CAQDAS)’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프로그램 패키지로 Nvivo, Hyper Research, QDA Miner, MAXQDA, ATLAS.ti, Dedoose, The Ethnograph, CAT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는 파랑새 2.0 등이 있다. 이들의 기능은 대체로 유사하지만, 유료, 무료, 웹 기반 소프트웨어 등으로 분류된다. 유·무료 여부에 따라 데이터의 확장기능, 안정성, 타 프로그램과의 연계, 서비스 팩 제공에서 차이가 있다.³¹

³⁰ 오영범, 이현철, 정상원, 『질적자료분석』, 파주시: 아카데미프레스, 2016, p.56

³¹ CAQDAS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각 프로그램의 장단점은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에서 개설한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 <http://guides.library.illinois.edu/c.php?g=348074&p=2346110> (2016.11.05. 검색).

CAQDAS 프로그램이 할 수 있는 작업은, 현장노트 만들기, 자료 제작, 편집, 코딩, 저장, 검색, 자료 연결, 메모, 내용 분석, 자료 디스플레이, 결과 제시 및 확인, 이론 개발, 개념지도 제시, 연구 자료 기술 등이다.³² 이러한 기능을 바탕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질적 연구의 도구로 이용할 때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컴퓨터 프로그램은 질적 자료를 저장하고 조직할 수 있도록 해준다. 둘째, 텍스트와 사진이나 컴퓨터 모니터로 보이는 그림을 캡처하여 코딩하고 주제로 묶는 것을 돕는다. 셋째,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코드명과 관련된 공통된 문장이나 조각을 찾게 해주며 코드들 간 비교를 용이하게 해준다. 넷째,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이한 추상적 수준을 개념화 할수 있으며, 다섯째, 코드나 범주를 시각화하여 보여줄 수 있으며, 여섯째, 연구 과정에서 기록하는 연구노트, 메모 등을 저장하여 보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코딩된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주제화한 결과물을 조직도나 템플릿으로 나타낼 수 있다.³³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이 연구 질문을 던지고, 주제를 설정하고, 방법론을 선택하며, 연구 성과를 글쓰기로 서술하는 등의 연구의 본질적인 부분을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세계관과 철학적 지향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이러한 것까지 의존할 수는 없다. 다만, 질적연구가 줄곧 지적 받아 왔던 단점들, 즉 연구과정의 일관성, 자료의 저장, 자료의 통일적인 연관 관계 비교 분석의 정확성, 결과물의 시각적 편의성 등에서 상당한 유용성 등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NVIVO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한다.³⁴

³² 오영범 외(2016), pp.22-23.

³³ Cresswell(2010).

³⁴ 다양한 CAQDAS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 NVIVO의 경우 한글을 읽을 수 있고 코딩도 가능하지만, 매뉴얼 게시나 결과물 도출에 대한 한글 기능이 없다. 다른 소프트웨어는 아예 한글이 이용이 거의 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출시된 파랑새 2.0은 한글 사용이 가능하지만, 기능이 단순하고 성능에 비해 가격이 만만치 않다는 단점이 있다.

III. 한국과 관련국들의 주요 문서에 근거한 동반자관계

1. 한국과 동반자 국가와의 외교 관계

1) 한국-미국 관계: 동맹 동반자관계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세계 각국이 동반자관계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동반자관계 외교가 중국, 러시아, EU 등의 외교 전략에서 자주 등장하는 반면, 초강대국 미국의 외교 전략에서는 언급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2006년 1월 19일 한국과 미국은 “동맹 간 동반자관계를 위한 전략 협의회 출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는 안보 관계에 집중화 되어 있던 양국의 전략 관계를 넘어서는 이례적인 것이었다. 이 성명에서는 반 테러리즘,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등 기존의 안보 관련 내용뿐 아니라 양국이 민주주의, 인권, 법치에 대한 이념을 공유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대처를 위한 협력, 질병(전염병)예방 등의 선도사업(Initiatives)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협의는 장관급 회의였고,³⁵ 이듬해 있었던 2차 회의에서도 차관급 회의에 그친 후³⁶ 이렇다 할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정하기에는 이르지만, 적어도 한-미 관계에서는 동반자외교 관계가 형식적이든, 실천적이든 크게 강조되지 않는다고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미국과의 관계는 1953년 이후 동맹 조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동맹관계이며, 오직 양국 간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동반자관계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한-미 관계를 동맹과 동반자관계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의미로 이해하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³⁷ 또 하나의 예외적 사례는 2012년 5월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이 체결한 ‘전략적 동반자관계 협정’이다.³⁸ 이 협정에서는 민주주의 가치의 증진 및 공유,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보 유지, 지역적 안보 및 협력의 강화, 개발협력, 아프가니스탄의 제도 및 거버넌스 강화 등이 언급되었으며 2024년을 시한으로 정하였다. 이 협정에서 미국의 탈리반 포로들을 아프가니스탄에 인계하고 지역 안보와 반테러리즘을 위해 장기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 반면,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미국의 도움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개발에 힘쓰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³⁹

그러나 미국의 전략적 동반자 협정은 매우 소수에 그치고 있으며, 동맹 위주의 미국 외교 정책에서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엄격하게 보면 동반자관계 외교의 특성은 냉전의 유산인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이나 (군사적)동맹을 추구하는 대신, 초강대국 중심의 국제관계에 대한 비판을 담으면서 어느 일방의 독주가 아닌 다자주의 원칙을 담고 있기 때문에 동맹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냉전 이후 여전히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이 동반자외교 대신 동맹주의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2) 각국의 동반자관계의 단계

앞서 언급한대로 동반자관계를 선도하는 국가들은 범위와 정도에 따라 단계별 구분을 두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구분이 어느 정도 엄격함을 띄고 있는지는 논란이 많지만 관계의 깊이는 구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³⁵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Launch Strategic Consultation for Allied Partnership”,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State Archive, 2016년 1월 16일.

³⁶ “U.S.-ROK Strategic Consultations for Allied Partnership Sub-Ministerial Session”,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State Archive, 2007년 10월 11일.

³⁷ 황지환, “미중 경쟁시대 한미동맹의 동반자관계”, 『JPI 정책포럼』, 2016-07, 2016.

³⁸ 원제목은 “Enduring 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of America and the Islamic Republic of Afghanistan”이다.

³⁹ “Afghanistan and US sign prison transfer deal”, Aljazeera, 12, March 2012, <http://www.aljazeera.com/news/asia/2012/03/201239161540182861.html> (2016.11.05. 검색)

도표 1) 각국의 동반자외교 관계의 단계

국 가	동반자외교 관계의 단계 (낮은 단계 → 높은 단계)
한 국	포괄적 동반자관계 →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ex. 러시아) →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ex. 중국) → 전략적 동반자관계(ex. 멕시코, 알제리,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루마니아) →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포괄적 전략적 동맹 관계(ex. 미국)
중 국 ⁴⁰	수교관계 → 우호협력관계 → 우호협력동반자관계 → 세계적 범위의 책임 있는 동반자관계 →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 → 전략성 협력관계 → 전략적 협력관계 → 전통적 우호 협력관계(ex. 북한) → 전략적 호혜관계(ex. 일본) →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관계 → 지속발전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관계 → 전략적 동반자관계 →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ex. 한국) → 전략적 전면 동반자관계(ex. EU) → 전략적 협업 동반자관계(ex. 러시아)
러시아 ⁴¹	전략적 동반자관계 (ex. 중국, 한국, 인도, 베트남), 진취적이며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ex. 아세안), 장기적 동반자관계(?)(ex. 미국), 창조적 동반자관계(ex. 일본)
EU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인도, 일본, 멕시코,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미국 등 (10개국)

출처: 김흥규(2009), 신범식(2010) 및 기타 자료를 필자 재정리

도표 1)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국제관계에서 동반자외교관계를 선언하고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는 국가들의 단계별 구분이다. 2014년 기준으로 중국은 약 47개 국가와 동반자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외에도 한국, 러시아, EU 등이 동반자관계를 전개하고 있다. 단계가 복잡한 만큼 각각의 차별성이 있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구분이 쉽지 않다. 중국은 2004년 유럽연합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를 수립하면서 원자바오(溫家宝) 총리가 비교적 명쾌하게 이를 정의내리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포괄적(comprehensive)이라는 것은 모든 차원(all-dimensional)에서, 광범위(wide-ranging)하며, 다층적(multi-layered)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경제적, 과학적, 기술적, 정치적, 문화적 분야가 전부 포함되며 양자적, 다자적 관계, 정부간-비정부간 관계를 가리지 않는다. ‘전략적’이라는 것은 장기적 안목에서, 양자 관계에 관한 보다 큰 그림을 담겠다는 뜻이며, 이념과 사회 체제를 초월할 뿐 아니라, 개별 사건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동반자관계’는 동등한 수준에서

⁴⁰ 김흥규, 2009, p.296.

⁴¹ 신범식, 2010, p.139.

협력을 뜻하며 상호 이익을 취하여 모두가 승자가 된다는 것으로 이는 상호 존중과 신뢰, 그리고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큰 이슈에 대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을 뜻한다...”⁴²

유럽연합의 경우 한국과의 FTA 체결 과정에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언급한 바 있다. 즉, 유럽연합은 21세기에 닥칠 여러 가지 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협력을 위하여 2010년에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고 소개하면서 양자간 관계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말하자면,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통해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하여 다양한 대처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적, 지역적 관심사에 대하여 조화(coordination)와 협력(cooperation)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 맥락에서 2010년에 마련된 EU-Korea Framework Agreement는 협력과 대화를 강화시키기 위한 기초가 된다고 보았으며 이를 기초로 국제적인 관심사인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인권(human rights), 테러리즘에 대처(cooperation in the fight against terrorism), 기후변화(climate change),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와 개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등을 함께 해야할 과제로 보았다. 더 나아가 EU는 한국을 가리켜 ‘뜻이 맞는 동반자(like-minded partners)’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데,⁴³ 설명을 보면, EU와 한국은 글로벌 무대에서 서로를 뜻이 맞는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EU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비록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EU가 추구하는 민주주의, 인권, 시장 경제 등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보고 있다.

⁴² Speech by H.E. Wen Jiabao, Premier of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russels, 6 May 2004, 중국 외교부, <http://www.chinamission.be/eng/zt/t101949.htm> (2016.11.05. 검색)

⁴³ EEAS homepage > Headquarters Homepage > South Korea and the EU, https://eeas.europa.eu/headquarters/headquarters-homepage/8789/south-korea-and-the-eu_en (2016.11.05. 검색)

2. 문서에 나타난 동반자관계의 의미 해석

이와 같은 서술적 설명을 떠나 각 외교문서의 진술문에 담겨진 동반자관계가 어떤 맥락에서 담겨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포괄적, 다의적, 해석적 관점에서 기존의 정의된 서술적 설명과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각국 외교부, 또는 연구자들에 의하여 ‘동반자관계’가 무엇인지, 혹은 다른 관계 맺음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많은 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것은 그것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언어적 특성 때문이다. 국제정치학이 결국은 텍스트(text)의 공간이고 외교문서가 텍스트의 실천적 측면이라면 텍스트를 구성하는 주체들이 작성한 언어는 필연적으로 ‘개념적 혼성(conceptual blending)’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개념적 혼성’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언어는 무엇을 지시할 때 그것을 하나의 혼성체로 인식하는데 이를 환유적 효과를 통해 드러낸다. 즉, 우리의 심리공간(mental space) 내에 입력공간(input space), 총칭공간(genericspace), 혼성공간(blending space)을 각각 두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때 입력공간과 혼성공간이 개념적 통합 네트워크(conceptual integration network)를 이루어 혼성체를 생성해 낸다는 것이다.⁴⁴ 즉, 행위자의 행동과 정책 결정은 입력공간과 입력공간 간의 만남 속에서 압축이 되며 여기에 언어의 주체가 기존의 일반지식(세상의 복합지식)을 끌어들이어 입력공간의 정보요소들과 혼성시킨다는 것이다.⁴⁵ 이런 이유에서 외교문서의 작성자에게 필연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개념적 혼성을 텍스트 속에서 다양하게 해석해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⁴⁴ 개념적 혼성에 관해서는 G. Fauconnier and Mark Turner, ‘Conceptual Integration Networks’, *Cognitive Science*, vol. 22, no.2, 1998, pp.133-187; S. Coulson and Todd Oakley, ‘Metonymy and Conceptual Blending’, In *Metonymy and Pragmatic Inferencing*, edited by Klaus-Uwe Panther and Linda Thornburg, 2003, pp. 51-80.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 Publishing Company; 김종도, 『인지문법의 관점에서 본 환유의 세계』, 서울: 경진문화사 참조, 2005.

⁴⁵ 이와 관련해서는 도종윤, “환유를 통한 국제정치 텍스트의 해석: 유럽연합의 대북 전략 문서를 시험적 사례로”, 『한국정치학회보』 48집 4호, 2014, pp.271-295 참조.

1) 개념화

여기서는 ‘한국-EU’, ‘한국-러시아’, ‘한국-중국’ 간의 동반자외교관계에 관해 문서 해석을 시도하였다. 앞서 제기된 바와 같이 근거이론이 주된 연구의 접근 방법이며, 첫 시작은 각 문건의 지시체(reference)에 드러난 의미를 개념화하는 코딩작업이다.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겠으나 여기서는 범위를 좁혀 ‘동반자관계’가 어떻게 의미화되어 해석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오픈코딩이 아닌 제한코딩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동반자(partners)’가 각 문건에서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문건마다 ‘동반자’를 검색하여 이 단어와 관련된 앞뒤 문장을 진술문의 지시체로 설정한 후, 이를 부호화(coding)하였다. 문건은 다음과 같다.

도표 2) 한국-EU 간 문건

한국-EU		
Name	Nodes	References
Framework_agreement_final 2010	7	7
2009 한국-EU 정상회담	6	6
2015 한국-EU 정상회담	6	6
2013 한국-EU 정상회담	4	4
2006 한국-EU 정상회담	3	3
2010 한국-EU 정상회담	1	1

도표 3) 한국-러시아 간 문건

한국-러시아		
Name	Nodes	References
한-러 공동성명(1999년 5월, 모스크바)	2	2
한-러 공동성명(2001년 2월, 서울)	2	2
한-러 공동성명(2004년 9월, 모스크바)	1	1
한-러 공동성명(2005년 9월, 모스크바)	1	1
2013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간 공동성명	1	1
1990, 한국-소련 수교	0	0
1992년 11월 20일 한-러공동성명	0	0

도표 4) 한국-중국 간 문건

한국-중국		
Name	Nodes	References
2013 한중미래비전 공동성명	6	6
2014 한중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및 부속서	4	4
2003. 07. 08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	2	2
1998 한중정상회담 공동성명	1	1
2008. 05. 28 01명박 대통령 국빈 방중 계기 한중간 공동성명	1	1
한중 수교 공동성명(1992.08.24)	0	0
2008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8월 25일)	0	0

1차 부호화 작업은 한국-EU 문건 6건, 한국-러시아 문건 7건, 한국-중국 문건 7건으로 하였다. 각 개별 문건마다 ‘동반자(partners)’를 검색하여 해당 단어가 들어간 진술문을 노드(node)를 만들었다. 도표 2), 3), 4)에서 보듯이 각 문건의 진술문마다 부호화를 시도하여 하나의 노드를 만들었다. 자료에 따르면, ‘동반자(partners)’가 한국-EU 관계에서는 27번, 한국-러시아 관계에서는 7건, 한국-중국 관계에서는 14번 언급되었으며 노드도 같은 수만큼 생성되었다.

도표 5) 동반자가 언급된 진술문의 부호화(coding)

Name
- 1996년에 서명된 기본협정을 개정과 한국-EU 간 FTA의 협상의 진전에 환영. 이 두 협정은 양자간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
- 21세기 양국간 지속적인 발전의 기회
- EU는 동유럽 동반자관계를 비롯하여 주변국들의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과 노력을 설명
- EU의 위기관리 운영(Crisis Management Operation)에 한국이 참여하기로 함. 이는 EU와 관계를 맺고 있는 아시아 국가 중에 처음
- UN 현장의 원칙과 수교 이래 발전해 온 선린우호 협력에 따라 21세기 미래를 향한 한중 협력 동반자관계 구축
- 각 부처, 의회, 정당, 싱크탱크, 국책기관간의 정기 교류 및 합동 전략 대화, 학계 및 1.5트랙 대화 추진하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함
-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
- 공동의 관심사와 중장기적 문제를 수시로 긴밀하게 논의하는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 공적, 사적 영역에서 재원기구를 강화, 시장 메커니즘 및 기후변화에 대한 지원을 포함
- 글로벌 경제의 회복과 금융 시장의 안정화가 한국-EU 모두의 핵심 과제를 언급
- 기본협정과 FTA 체결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
- 다음 단계를 위한 전략적 동반자관계
- 대화, 상호존중, 평등한 동반자 정신, 다자주의, 총의, 국제법 존중 등 가치를 공유하고 존중
- 동반자관계 및 가치의 공유에 기반하여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하여 협력하고 대화
- 동반자관계는 21세기를 향한 양국간 상호교류에서 지도적 개념이 됨을 합의
- 미래 비전에 대한 합의와 실천
- 미래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한국-EU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 세계 공동체의 평화와 개발을 염두해야 함. 이를 위해 양측 정상은 양자 대화, 정치대화, 연례 혹은 격년 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다고 합의
- 민주주의, 법치, 인권, 시장 경제를 기본가치로 동반자관계를 강화

-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함. 양측의 컴퓨터 위기대응팀의 협력 기반이 되는 EU-한국 사이버정책자문회의를 환영
- 상호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 선언
- 서로 다른 극이 상호 건설적으로 협력하는 다원적 세계 강화 지향. 특히 러시아는 정치적 면에서 대등한 동반자관계와 호혜 협력이 국제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주장
- 성공적인 Bonn 프로세스를 지지. 아프가니스탄의 민주주의, 지속가능한 국가 건설을 위한 Afghanistan Compact 수행을 위해 밀접한 동반자관계를 유지
- 양자적, 지역적, 글로벌 수준에서 파트너십 강화와 개발협력
- 양측은 2010년 이후 진행되어 온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만족. 향후에도 포괄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미래 지향적 관계에 계속 매진할 것임
- 양측은 모두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 인권, 핵확산 금지, 반테러리즘 등 같은 가치 공유. 또한 대화, 상호존중, 평등한 동반자관계, 다자주의, 총의, 국제법 존중에 기반한 합의
- 양측은 효율적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의 더 많은 노력에 합의하면서 SDGs 2030 아젠다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합의. 또한 한국-EU 간 개발에 관한 정책 자문회의를 강화시키기로 함
- 에너지와 자원확보를 위한 양자적, 다자적 협력의 중요성 강조
-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등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 논의를 협력
-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국제이슈, 미래의 동반자관계,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가치와 관점을 재확인 함
-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은 데에 만족. 50년 외교 관계와 미래 비전을 위해 공동선언 작성
-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
-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함
-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신뢰에 기반하여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미래비전 제시
-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위해 세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
-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내실화 목표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음
-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내실화를 위한 다섯가지 세부 시행계획 추진
-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양자 및 지역 차원을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함
-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내실화
-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 구축하기로 함
-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동반자관계를 성장시킴
-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지향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공동의 의지 강화
- 중요한 이웃, 공동발전, 지역평화 기여, 아시아 발전 추진,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동반자
- 지속적인 FTA 수행이 중요함을 양측이 공감.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바탕으로 FTA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향후 함께 일하기로 함

- 한국은 유일하게 EU와 3개 기본협정(기본협정, FTA, 위기관리 참여협정)을 체결한 국가임. EU는 위기관리 참여협정에 따라 한국이 소말리아의 아덴만에서 벌이고 있는 EU의 해적 소탕작전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하며 국회의 비준이 빨리 처리되기를 바랍
- 한국은 중국의 개혁개방, 현대화 건설, 인접국과의 선린 동반자 외교정책을 높이 평가
-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와 관련하여 2016년부터 EU의 기술협력 프로젝트가 출범하는 것을 환영. 양자간 기후 변화에 관하여 협력
- 양측은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Busan Partnership)의 수행을 노력하기로 함. 한국과 양자간 개발협력 이슈를 다루기 위하여 '한국-EU 간 개발에 관한 정책 대화'를 추진하는데 합의함

구체적으로 진술문이 부호화 된 경우는 위와 같으며 총 48개가 선별되었다. 이는 국가별, 시기별 구분은 하지 않은 것이다.

2) 범주화

1차로 부호화된 진술문은 다시 재정리하여 2차 부호화를 하여 '가치', '과제', '미래', '평가' 등 4개로 범주화하였고 이는 도표 6)과 같이 정리되었다. 4개로 범주화한 기준은 동반자외교 관계가 기본적으로 양자간 합의된 정책의 지도방향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플랫폼이라는 판단에 근거하였다. 따라서 '정책', '지도방향', '플랫폼'이라는 의미가 파생시킬 수 있는 주제들 예컨대 실천, 과제, 미래, 이념, 평가, 장애물, 전략, 가치 등의 관련 언어를 개방코드로 연상하였고 이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4가지로 재정리한 것이다. '가치'는 동반자관계를 맺기로 한 당사자들이 공통된 이념적 배경, 정책 목표, 공유하는 기본 태도와 관념 등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가치의 하위 범주에는 '정의(定義)'가 포함되었는데, 일부 사례에서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적극적으로 예시 혹은 적시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범주안에 포함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예시일 경우도 논란의 여지없는 절대적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윤곽을 그리고자 가치의 하위 부분으로 종속시켜, 당사자의 정의선언이 가치를 어떻게 구성하고자 하는지 알고자 하였다.

도표 6) 진술문의 4개 범주화

Name
- 가치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
공동의 관심사와 중장기적 문제를 수시로 긴밀하게 논의하는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대화, 상호존중, 평등한 동반자 정신, 다자주의, 총의, 국제법 존중 등 가치를 공유하고 존중
동반자관계 및 가치의 공유에 기반하여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하여 협력하고 대화
민주주의, 법치, 인권, 시장 경제를 기본가치로 동반자관계를 강화
= 정의
기본협정과 FTA 체결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
상호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 선언
서로 다른 극이 상호 건설적으로 협력하는 다원적 세계 강화 지향. 특히 러시아는 정치적 면에서 대등한 동반자관계와 호혜 협력이 국제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주장
성공적인 Bonn 프로세스를 지지. 아프가니스탄의 민주주의, 지속가능한 국가 건설을 위한 Afghanistan Compact 수행을 위해 밀접한 동반자관계를 유지
양자적, 지역적, 글로벌 수준에서 파트너십 강화와 개발협력
양측은 모두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 인권, 핵확산금지, 반테러리즘 등 같은 가치 공유
또한 대화, 상호존중, 평등한 동반자관계, 다자주의, 총의, 국제법 존중에 기반한 합의
에너지와 자원확보를 위한 양자적, 다자적 협력의 중요성 강조
역내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등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 논의를 협력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함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양자 및 지역 차원을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함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기로 함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동반자관계를 성장시킴
중요한 이웃, 공동발전, 지역평화 기여, 아시아 발전 추진, 세계 번영 촉진하는 동반자
지속적인 FTA 수행이 중요함을 양측이 공감.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바탕으로 FTA를 활성화 시키기위해 향후 함께 일하기로 함
- 과제
EU의 위기 관리 운영(Crisis Management Operation)에 한국이 참여하기로 함. 이는 EU와 관계를 맺고 있는 아시아 국가 중에 처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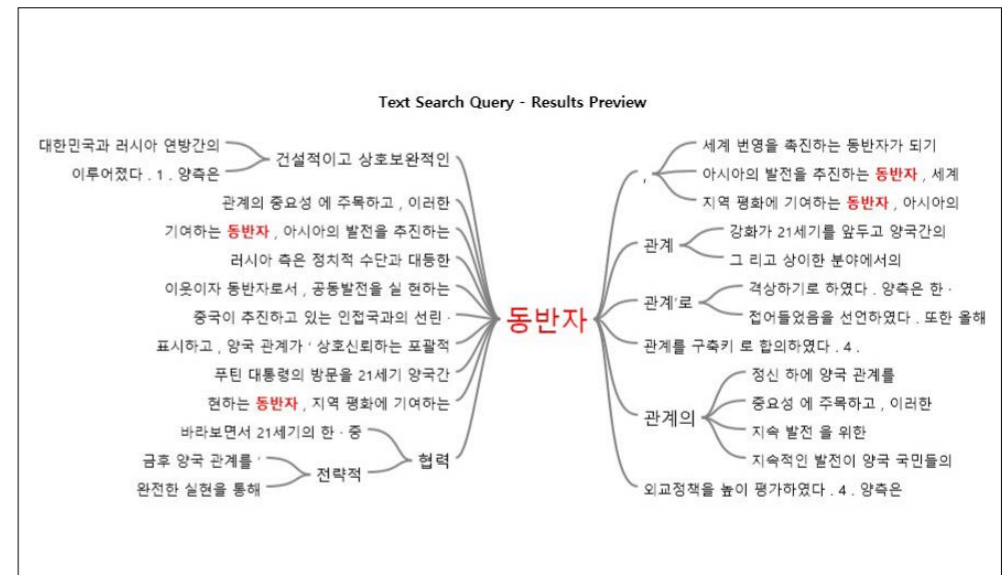
공적, 사적 영역에서 재원기구를 강화. 시장 메커니즘 및 기후변화에 대한 지원을 포함
글로벌 경제의 회복과 금융 시장의 안정화가 한국-EU 모두의 핵심 과제를 언급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함. 양측의 컴퓨터 위기대응팀의 협력 기반이 되는 EU-한국 사이버정책자문회의를 환영
양측은 효율적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의 더 많은 노력에 합의하면서 SDGs 2030 아젠다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합의
또한 한국-EU 간 개발에 관한 정책 자문회의를 강화시키기로 함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위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내실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공동의 의지 강화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와 관련하여 2016년부터 EU의 기술협력 프로젝트가 출범하는 것을 환영
양자간 기후 변화에 관하여 협력
양측은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Busan Partnership)의 수행을 노력하기로 함. 한국과 양자간 개발협력 이슈를 다루기 위하여 '한국-EU 간 개발에 관한 정책 대화'를 추진하는데 합의함
- 미래
21세기 양국간 지속적인 발전의 기회
UN 헌장의 원칙과 수교 이래 발전해온 선린우호 협력에 따라 21세기 미래를 향한 한중 협력 동반자관계 구축
각 부처, 의회, 정당, 싱크탱크, 국책기관간의 정기 교류 및 합동 전략 대화, 학계 및 1.5 트랙 대화 추진하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함
다음 단계를 위한 전략적 동반자관계
동반자관계는 21세기를 향한 양국 간 상호교류에서 지도적 개념이 됨을 합의
미래 비전에 대한 합의와 실천
미래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한국-EU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 세계 공동체의 평화와 개발을 염두해야 함
이를 위해 양측 정상은 양자 대화, 정치대화, 연례 혹은 격년 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다고 합의
양측은 2010년 이후 진행되어 온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만족. 향후에도 포괄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미래지향적 관계에 계속 매진할 것임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국제이슈, 미래의 동반자관계,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가치와 관점을 재확인 함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신뢰에 기반하여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미래비전 제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내실화를 위한 다섯가지 세부 시행계획 추진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등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지향
- 평가
1996년에 서명된 기본협정의 개정과 한국-EU 간 FTA의 협상의 진전에 환영. 이 두 협정은 양자간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
EU는 동유럽 동반자관계를 비롯하여 주변국들의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과 노력을 설명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은 데에 만족. 50년 외교 관계와 미래 비전을 위해 공동선언 작성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내실화 목표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음
한국은 유일하게 EU와 3개 기본협정(기본협정, FTA, 위기관리 참여협정)을 체결한 국가임
EU는 위기관리 참여협정에 따라 한국이 소말리아의 아덴만에서 벌이고 있는 EU의 해적 소탕작전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하며 국회의 비준이 빨리 처리되기를 바램
한국은 중국의 개혁개방, 현대화 건설, 인접국과의 선린 동반자 외교정책을 높이 평가

3) 구조화

4개로 범주화 된 각 노드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구조화가 있을 수 있으나, 우선 '동반자'라는 문구와 관련된 연관 관계는 다음 그림 3과 같이 도출되었다.

그림 3) '동반자'를 중심으로 한 텍스트 간 관계



‘동반자’를 중심으로 좌측의 말 묶음과 우측의 말 묶음을 연결 지을 수 있다. 좌측의 경우, ‘상호보완적’, ‘관계의 중요성’, ‘기여하는’, ‘아시아의 발전’, ‘대등한’, ‘이웃’, ‘공동 발전’, ‘인접국’, ‘선린’, ‘상호신뢰’, ‘포괄적’, ‘21세기’, ‘지역평화’, ‘전략적’, ‘협력’ 등이 언급되었고, 이 중에서 ‘협력’은 ‘전략적’이라는 말 묶음을 포함하고 있다. 오른쪽 말 묶음에서는 ‘세계번영’, ‘아시아의 발전’, ‘지역평화에 기여’, ‘관계’, ‘외교정책’, ‘격상’ 등이 도출되었다. 이를 구조적으로 해석하면, 좌측 부분의 (미래지향적) 과제가 ‘동반자(관계)’를 통하여 오른쪽 말 묶음으로 ‘평가’ 혹은 ‘실현’의지로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인접국’, ‘선린’, ‘상호신뢰’ 등이 드러난 왼쪽 말 묶음은 동반자관계가 지향하는 미래 지향적 과제라고 하면, 이는 동반자관계를 통해 ‘지역 평화에 기여’, ‘지속적인 발전’, ‘격상’ 등의 평가 혹은 실적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련성은 연구자의 직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CAQDAS를 통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 예상치 못한 도출물이다.

한편, 아래의 그림에서는 동반자관계를 중심으로 했을 경우 지시문에 어떤 문구가 많이 노출되었는지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양측은’으로 자료가 ‘한국-EU’, ‘한국-중국’, ‘한국-러시아’ 등의 양자 관계를 기본으로 맺어진 협정문/조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주 등장하였다. 이를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동반자외교 관계에 대해 양자적 관심의 접근임이 체결 주체의 내면에 자리잡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제시된 모든 동반자 외교 속에서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국가와의 관계에서만 의미있게 드러나고 있다면, 그들과의 관계 설정에서 ‘양자’가 왜 강조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빈번하게 보이는 단어로는 cooperation, 협력, agreement, leaders, security 등이었는데, 이는 동반자관계 외교가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들이다.

그림 4) 동반자 관련 어휘의 빈도 클라우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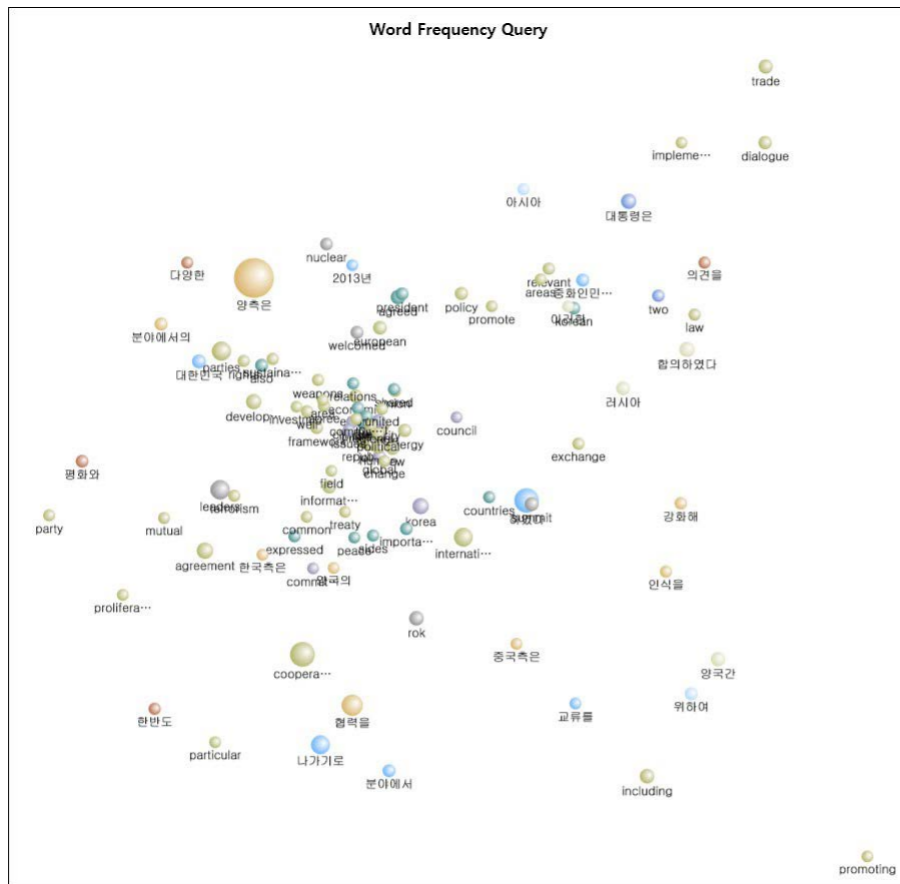


다음 도표는 동반자 관련 언어의 군집 분포도를 나타낸 것이다. 두드러진 것은 EU 관련 협정/합의문에서 나타난 어휘들이 비교적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는 것이다(연두색/회색). 몰려 있는 단어들은 energy, framework, development, global change, human 등이며, 이는 러시아(파란색), 중국 관련 문건(갈색)의 어휘들이 전체적으로 흩어진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것과는 대조된다. 또한 ‘한국-EU’ 문건에서 어휘 군집이 몰려 있는 것은 비교적 다른 사례에 비해 양측이 지향하는 동반자외교 관계의 지형이 응집되어 있으며 일관성을 띄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자료 중에 양측이 합의한 ‘2010 Agreement Framework’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FTA를 비롯하여 기능적으로 양측이 함께 해나가야 할 과제가 비교적 분명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관성을 높여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 문건의 경우 ‘양측’을 매우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며, 의견, 인식, 협력, 한반도 등이 서로 연관성이 없이 흩어져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러시아의 경우 연관성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흩어져 있으며, 강조 되는 어휘 또한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았다. 한편, 또 하나의 특징은 정상회담의 문건만으로 자료화된 러시아, 중국의 경우

보다 '2010 Agreement Framework'이 포함된 EU의 경우가 보다 명확했는데, 정상외교 보다는 협정외교가 적어도 기능적인 면에서는 보다 분명함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림 5) 동반자 관련 어휘의 군집분포도



4) 주제화

‘범주화’ 및 ‘구조화’ 된 개념들과 대상들을 동반자외교관계에 대하여 주제화를 시도 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우선 기존의 동반자관계는 미래 비전적인 측면과 아울러 실천적인 측면에서도 성공적이었으며, 상호 선린우호 외교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져 왔기에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치’적 측면에서, 동반자관계는 협력을 맺은 당사국들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이 두드러지면, 이는 공동의 관심사와 중

장기적 문제를 수시로 긴밀하게 논의하는 성숙한 관계를 일컫는다. 더 나아가 대화, 상호존중, 평등, 다자주의, 총의(consensus) 등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민주주의, 법치, 인권 신장, 우호적인 경제 관계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는 상호신뢰, 개발협력, 민주주의, 인권, 핵확산 금지 조약, 반테러리즘, 상호존중, 다자주의, 총의 등의 원칙을 강화해 나간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는 단지 양자간의 관계를 넘어 이웃과의 공동 발전, 지역 평화 정착에 기여함으로써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동반자관계를 이룰 때에야 의미가 있다.

한편, 이러한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열거하면 시장 메커니즘 강화, 기후변화 대처, 사이버 안보 협력, 탄소배출권 거래의 제도화, 개발협력 이슈에 대한 협력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제를 통해 동반자관계 외교의 미래는 보다 강화될 것이며, UN 헌장에 제시된 선린우호협력의 틀 안에서 각국의 행정 기관은 물론 학계 등을 포함하는 대화와 교류가 정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류와 실천은 미래비전의 선명화를 위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 공동체의 평화와 개발은 세계 공동체의 그것과 병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에서 호혜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IV. 맺음말

이 글은 ‘한국-EU’, ‘한국-러시아’, ‘한국-중국’ 간 최근 맺어진 외교문서를 토대로 동반자관계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근거이론을 통해서 살펴 보았다. 동반자관계에 관한 기존의 여러 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의미와 전략, 방향성이 모호한 것은 그것이 자료에 기반한 접근이 아닌 수사적 표현에 집착하여 당위적 전략으로 이해한 까닭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외교 관련 문건들을 총괄적으로 검토하여 동반자관계와 관련된 어휘, 곧 ‘동반자(partners)’를 중심으로 진술문을 부호화 하고, 이를 범주화, 구조화, 주제화 하여 그 뜻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48개로 1차 부호화된 동반자 관련 개념은 가치(정의), 과제, 미래, 평가 등 네 가지 범주화가 가능하였고, 이들을 구조적으로 연계하여 보았을 때 ‘공동발전’, ‘선린’, ‘상호신뢰’, ‘지역평화’, ‘전략적’, ‘협력’ 등을 위해서는 동반자관계

라는 ‘외교정책’을 통하여 ‘세계번영’, ‘아시아의 발전’, ‘지역평화에 기여’ 등에 기여하여야 하며 이를 향후 ‘격상’하여 점진적으로 심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주제화하면, 민주주의, 법치, 인권 시장 경제의 강화와 상호존중, 평등, 다자주의, 총의 등의 가치를 통하여 개발협력, 민주주의, 인권, 핵확산 금지 조약, 반테러리즘 등의 도전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눈에 띄는 것은 한국과 유럽연합의 동반자관계는 상호 응집력있는 진술문 간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나, 한국-중국, 한국-러시아 간의 동반자 관련 진술은 다소 파편적이고 일관된 면이 결여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자료 중심의 이러한 접근이 가진 한계점도 있다. 첫째, 이번 결과에서는 현실에서 드러나는 동반자관계의 단계별 차이점을 구분하여 포착하지 못하였고, 둘째, 수집된 문건이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48건) 자료를 보다 세분화 하여 각 관계의 구분, 국가별 차이점 등 보다 세심한 상황은 접근하지 못하였으며, 셋째, 부호화를 1차에 한정하여 2차, 3차 재정리하면서 타 연구자들과 타당성 논의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번 연구는 동반자관계에 관한 기존의 막연한 수사적 접근을 자료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각 단어에 근거한 국가별 응집성과 일관성까지 대별해 볼 수 있는 해석이 도출되었다는 점에 의미부여를 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강준영, “전략, 동반자, 협력… 단어와 수사보다 내실에 주목해야”, 『신동아』, 2009년 12월 호.
- 게오르기 톨로라야(Georgy Toloraya), “러시아와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모색: 안보협력에서의 문제와 시사점들-”,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배정호, Alexander N. Fedorovskiy(편), 통일연구원, 2010, pp.89-118.
- 고상두, “러시아는 한국의 창조외교를 위한 전략적 동반자”, 『JPI PeaceNet』, 2016년 10월 8일, http://www.jpi.or.kr/kor/regular/policy_view.sky?code=archive&id=5507 (2016.11.05.검색)
- 김영천&주재홍, “질적 연구에서의 글쓰기: 다양한 접근들의 이해”, 『열린교육연구』, vol.18, no.1, 2010, pp.155-183.
- 김영천&정상원, “질적연구 방법으로서 문서분석”, 『교육문화연구』, vol.21, no.6, 2015, pp.253-285.
- 김영천&이동성, “질적 연구에서의 대안적 글쓰기 이론화 탐색”, 『열린교육연구』, vol.21, no.1, 2013, pp.79-76.
- 김흥규, “중국의 동반자 외교 소고(小考): 개념, 전개 및 함의에 대한 이해”, 『한국정치학회보』, vol.43, no.2, 2009, pp. 287-305.
- 노먼 덴진, 이보난 링컨 (Norman K. Denzin & Yvonna S. Lincoln) (저), 최육 외 (역), 2014. 『질적 연구 핸드북』, SAGE 아카데미프레스.
- 도중윤, “환유를 통한 국제정치 텍스트의 해석: 유럽연합의 대북 전략 문서를 시험적 사례로”, 『한국정치학회보』 48집, 4호, 2014, pp.271-295 참조.
- 박종원, 『질적 자료 분석: Nvivo 10응용』, 부산: 부경대학교 출판부, 2014.
- 서울신문, “전략적 동반자 관계란”, 2010년 1월 27일.
- 서진영,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의미와 실제”, 『국가전략 연구』, vol/11, no. 2, 2011년(여름), pp.145-156.
- 신범식, “러-중 관계로 본 ‘전략적 동반자관계’: 개념과 현실 그리고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vol.44, no.2, 2010, pp.135-160.
- 연합뉴스, “한·캐나다 채택한 ‘전략적동반자관계’란”, 2014년 9월 23일.

- _____,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 2015년 5월 18일.
- 오영범, 이현철, 정상원, 『질적자료분석』, 파주시: 아카데미프레스, 2016.
- 이무성, “파트너십(동반자 관계) 외교관계에 관한 구성주의적 접근”, 『JPI 정책 포럼』, 제주평화연구원 2016.01.
- 이정남,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외교에 대한 이해와 한중관계”, 『평화연구』, vol.17, no. 2, 2009, pp.100-121.
- 존 크레스웰(John Creswell) (저), 조홍식 외(역), 『질적 연구 방법론』, 학지사, 2010.
- 중앙일보,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2009년 12월 1일
- 최진우, “EU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현황과 한-EU 관계”, 『유럽연구』 제28권 3호, 2010, pp.55-78.
- 한겨레, “한·베트남,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 2009년 10월 21일.
- “한중관계, 중요한 건 속 채우기”, 『한국일보』, 2008년 5월 29일. <http://www.hankookilbo.com/v/af21ce37c2c542a28edd4823f972f718>, (2016.11.05. 검색)
- 황지환, “미중 경쟁시대 한미동맹의 동반자 관계”, 『JP 정책포럼』, 제주평화연구원, 2016-7, 2016.
- “Afghanistan and US sign prison transfer deal”, Aljazeera, 12, March 2012. <http://www.aljazeera.com/news/asia/2012/03/201239161540182861.html> (2016.11.05. 검색)
- Charmaz, K. 2011. “Grounded Theory Methods in Social Justice Research”, in N. K. Denzin & Y.S. Lincoln (eds.),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4th), London: SAGE, pp.359-380.
- Charmaz, K. 2006.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Practical guide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London: SAGE.
- EEAS homepage > Headquarters Homepage > South Korea and the EU, https://eeas.europa.eu/headquarters/headquarters-homepage/8789/south-korea-and-the-eu_en (2016.11.05. 검색)
- Fauconnier, G. and Mark Turner, ‘Conceptual Integration Networks’. *Cognitive Science*, vol.22, no.2, 1998, pp.133-87.
- Feng Zhongping & Huang Jing, China’s Strategic partnership diplomacy: engaging with a changing world, ESPO(European Strategic Partnership

- Observatory,) Working Paper 8, June, 2014.
- Collins COBUILD English Dictionary, London: Harper Collins Publisher, 1998.
- Glaser, B.G. 1992. Basics of Grounded Theory Analysis, Mill Valley: Sociology Press.
- Reiterer, Michael, 2013. “The Role of ‘Strategic Partnerships’ in the EU’s Relations with Asia”. In The Palgrave Handbook of EU-Asia Relations, by Thomas Christiansen, Emil Kirchner and Philomena Murray(eds.) London: Palgrave, pp.75-89.
- Saldana, Johny 2009. The Coding Manual for Qualitative Researchers, London: SAGE.
-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SAGE.
- University Library,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Qualitative Data Analysis”, <http://guides.library.illinois.edu/c.php?g=348074&p=2346110>
-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Launch Strategic Consultation for Allied Partnership”,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State Archive, 2016년 1월 16일.
- “U.S.-ROK Strategic Consultations for Allied Partnership Sub-Ministerial Session”,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State Archive, 2007년 10월 11일.

A Study of Partnerships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pretation on Diplomatic Documents between S. Korea
and EU, Russia, and China

In the dictionary, 'a partnership' is defined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cerned actors and the parties who agree to cooperate for their mutual benefit. A partnership, however, is hard to identify, and it is difficult to build common criteria or principles that can be referred to for all possible events because "a partnership" is often considered as linguistic rhetoric alleged by some politicians. This research aims to draw out the general meaning of 'a partnership' by reviewing conclusions of the summit and the agenda that was adopted under the bilateral relationships between Korea–EU, Korea– Russia, and Korea–China. This work is examined on the basis of 'the Grounded Theory', one of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nd the text is interpreted through CAQDAS(Computer–assisted qualitative data analysis software) for the sake of efficiency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the research results. This research also provides a stepping stone for developing an account of a more systemic and data–centered approach regarding 'a partnership', and will contribute to building a theoretical framework for partnership strategy of South Korea.

Key words: Partnership, Qualitative Research, The Grounded Theory, CAQDAS, NVIVO.